

세계 경제위기와 호주 노동당 정부의 개혁정책 : 갱겨루는 뒤로 뛰지 않는다

김성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머리말

뒤로 뛰는 법을 모른다는 갱겨루를 국가의 상징물에 그려 넣는 십나라 호주는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2009년에도 보통 정도의 경제성장을 낙관하고 있다. 몇몇 대기업이 고용규모 조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린다는 의미보다는 경제위기 분위기를 이용하여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호주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집권한 지 만 1년을 맞은 노동당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호주를 보다 잘 방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제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한편, 집권 공약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조치, 특히 노동정책 개혁을 밀고 나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호주의 노동당 정권이 당면한 국내 문제 극복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호주의 집권 노동당과 케빈 러드 총리

호주의 중앙정치는 영국식 내각책임제를 바탕으로 한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당수는 총리가 되어 내각을 이끌며, 야당 당수는 예비 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하여 집권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한다. 호주에는 3개의 주요 정당이 있지만, 자유당(Liberal Party)과 국민당(National Party)은 중앙정치에서 줄곧 보수연합을 이루어 노동당(Labor Party)과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당정치의 형태를 띤다. 자유·국민 보수연합은 기업가와 농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며, 노동당은 도시근로자와 중산층을 주 지지기반으로 한다. 현재는 2007년 11월에 집권한 노동당이 정부를 이끌고 있다.

호주의 집권 노동당의 정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던 보수연합을 물리치고 노동당의 화려한 부활을 일구어 낸 케빈 러드 총리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케빈 러드 총리는 퀸즐랜드 주의 한 마을에서 1957년 농부와 간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¹⁾ 케빈 러드는 15세에 이미 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했고, 국립호주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아시아지역학을 전공한 이후에는 직업외교관의 길을 걸었으며, 출중한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중국 관련 업무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이후 케빈 러드는 1988년 자신의 고향인 퀸즐랜드 지방정치 무대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주 노동당 당수의 수석 보좌관으로 1989년 노동당이 30여년 만에 퀸즐랜드 주에서 보수당을 제치고 집권당이 되는 데 기여했다. 이후 퀸즐랜드 주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은 케빈 러드는 1996년 연방의회 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때 잠시 정치를 떠난 케빈 러드는 자신의 장기인 중국 전문성을 살려 경영컨설팅 회사인 KPMG에서 일했는데, 주로 호주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일을 도왔다. 이후 다시 정계로 돌아와 1998년에 연방의회 진출에 성공한 뒤, 케빈 러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차분히 경력을 쌓으며 노동당 예비내각 외무장관을 거쳐 2006년에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고, 2007년 총선에서 여당인 보수당을 큰 차이로 물리치고 총리로 등극했다.

케빈 러드 총리는 취임 후 1년 이상 좀처럼 7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²⁾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호주의 변화를 힘차게 주도하고 있다. 취임 첫날 그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호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후속 조치로 그는 가정용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액 증액, 새로운 연료절약형 자동차 개발에 1억

1) 호주 정부 총리 홈페이지 (www.pm.gov.au)

2) <http://au.acnielsen.com/news/200512.shtml>

5천만 달러 지원하기로 하였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그는 중국어가 능통한 직업외교관 출신답게 자신감과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과거 보수당이 미국과 관계 강화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다자적 외교관계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아시아의 중소강국으로서 위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그는 총리 취임 후 미국이 아닌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파격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동성결혼 등의 사회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경향을 보이는데, 자신의 정책적 판단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둔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³⁾ 경제와 노동정책에 있어서 그는 노동당의 전통적 정책에 비교적 충실하다. 아래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호주 정부의 경제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동당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인 노동법 개정에 대해 살펴 보겠다.

■ 미국발 금융위기와 호주 경제

호주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지만 한국 사람에게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 호주는 면적으로 보면 미국 본토와 엇비슷한 국토 대국이지만, 인구수로는 2천만 명 정도의 중소국이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영미식 자유방임형 시장경제 제도를 가졌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세금이 많고(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47%) 국가가 교육, 의료, 기본적인 주거를 책임지는 복유립형 복지국가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한때 제조업이 강했으나 지금은 나라 경제의 70%가 서비스산업이다.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과 지하자원이며, 주요 경제교역국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미국, 뉴질랜드이다. 1인당 GDP는 약 미화 3만 7천달러(2007년 기준)이다.⁴⁾

비록 영미형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지만,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호주는 비교적 느긋한 편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미국의 주요 은행의 파산에서 시작되었지만 호주의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건재하며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호주의 연방준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3) <http://www.news.com.au/heraldsun/story/0,21985,20872017-662,00.html>

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s.html>

연체율은 0.41%에 불과하다.⁵⁾ 또 호주의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식 신용위기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호주의 수출은 미국보다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들로의 수출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또한 탄탄한 복지제도 덕분에 실업률의 소폭 상승이 사회불안 요소로 이어질 염려도 크지 않다.

그러나 호주도 세계 경제위기의 불안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따라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는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노동당의 경기부양책은 경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에 한 푼이 아쉬운 가정에 현금을 넣어 주어 국민의 복리혜택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투입된 돈이 곧바로 시장으로 풀려나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연소자와 노약자 1인당 현금 1천 달러씩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특별 지급하여 연말연시 소비를 진작시켰다. 그리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부의 무상 지원액을 2만 4천 달러로 증액하여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꾀했다. 또한 향후 3년간 호주은행의 모든 예금에 대한 지급을 정부가 보장함과 동시에 시장의 예상에 앞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면서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진작시켰다.⁶⁾ 이와 같은 노동당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높아가는 경제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케빈 러드 총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바탕이 되었다.

■ 호주 노동정책 개혁사

케빈 러드가 이끄는 노동당이 2007년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약은 노동정책 개혁이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동당은 보수연합정권이 지난 수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급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법안들을 폐기하고, 부당해고 방지책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에 힘입어 큰 폭의 차로 보수연합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5) <http://www.businessday.com.au/business/australia-surviving-financial-storm-20080925-4ntl.html>

6) www.pm.gov.au

러드 노동당 정부는 기존의 노동유연화 관련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면서 한걸음씩 공약 이행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이 추구하는 노동정책 개혁은 호주가 지난 20여년 간 점진적으로 이루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지난 보수연합 정부가 지나치게 나간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신노동당 정부의 정책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호주의 노동정책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1856년 세계 최초로 일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한 나라로서 전통적으로 노동계의 힘이 강한 나라이다. 1898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사협상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노사관계의 틀이 만들어진 이래 호주는 직업별·산업별로 국가 차원의 노사 협상에서 정해진 급여와 업무 조건이 가장 중요한 인사관리의 준거가 되는 전통이 만들었다. 노사분쟁은 개별 사업장의 파업보다는 정부와 법원의 중재와 판결에 의해 주로 해결되는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호주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1960년대부터 변화를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변화가 가시화되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급진적인 변화를 겪은 후 지금은 조정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숨 가쁘게 진행되어 온 호주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의 기본 방향은 중앙집중적·전국적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개별 기업단위, 더 나아가 개인단위의 계약관계를 장려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신장시키는 것이었다.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2000년대 초 보수연합 정권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첫 삽은 오히려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떠졌다.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집권했던 노동당 정부는 호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중앙집중적 노사관계의 틀을 어느 정도 수정하고 시장의 기능을 보다 크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는 우선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로써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정부는 물가인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면서 노조가 여러 가지 사회개혁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협약이 맺어졌다. 이어서 1991년에 National Wage Case 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노사협상이 전국적인 중앙집중적 틀이 아닌 개별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변화의 폭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그 한 원인은 호주노사관계위원회(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 AIRC)가 개별 기업의 노사협약을 '공익'에 부합하도록 관리 감독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면서 과거의 중앙집중적 노사관계의 틀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년 뒤,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데, 그 결과는 이는 1993년에 통과된 노사관계법 수정안(Industrial Relations Act 1993)과 기업유연화법안(Enterprise Flexibility Agreements)이다. 이 법안을 통해서 호주의 근로자는 등록된 정식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더라도 사측과 단체협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노동조합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노동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제도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노동조합의 저항을 불러왔다. 노동조합은 고용주들로 이 법안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노조를 회피할 것을 우려했고, 그 우려는 실제로 몇몇 대기업의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호주에서 여전히 노사협상을 통한 단체협약이 매우 중요한 노사관계의 틀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노사관계위원회(AIRC)는 최저임금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단체협약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동당 집권 시절 노조의 협력과 반대 속에 조금씩 진행되었던 노사관계의 시장주의적 개혁은 1996년 보수연합 정권이 탄생하자 급격히 탄력을 받았다. 신임 하워드 보수연합 총리는 1996년 작업장노사관계 법안(Workplace Relations Act 1996)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를 꾀했다. 이 법안은 회사가 노동조합이나 다른 형태의 근로자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근로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근로자의 자동 가입을 규정하는 노사협약은 불법적인 것이 되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이 법안은 이미 충분히 급진적인 것이었으나 하워드 보수연합정부의 노사관계 시장화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4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연합은 기존의 노사관계법안을 한층 더 강화하여 워크초이스법안 (WorkChoices)이라 불리는 수정안을 2005년에 통과시켰다.

워크초이스 법안은 개인과 회사가 개별근로계약을 맺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그리고 개인과 회사의 근로계약은 노사협약에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노사협약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호주 노사관계위원회(AIRC)의 최저임금 설정권을 박탈하고, 그 위상을 '최소한의 권한만을 가진 자발적인 노사분쟁 중재 조직'으로 격하하면서 기존의 사회안전망 감시기능과 노사분쟁조정기능도 없었다. 이 워크초이스법안을 통해 호주는 급기야 개인과 기업 사이에 일어난 계약관계에 노조 및 정부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좁아진,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드문 수준의 시장주의적 노사관계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⁷⁾

그러나 하워드 정부가 야심차게 통과시킨 워크초이스법안은 지속적이고 격한 역풍을 맞았다. 우선 이 법안은 국민들의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여당 관계자조차 충분히 살펴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황급히 의회를 통과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정교함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안을 만든 하워드 보수당 정부 측은 이 법안을 통해 호주 경제가 보다 큰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노동계약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통해 보다 공정한 근로계약이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종교단체들은 장차 이 법안을 악용한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지나친 업무 부담을 강제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협할 것이며, 사회 소외계층의 고용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며, 사회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기업의 노사관계를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⁷⁾

워크초이스법안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쟁은 시간이 흐르면서 식기보다는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법안이 시행된 이후 우려했던 대로 근로조건이 나빠지고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실제로 나타나자 이 법안에 대한 반감도 커져 갔다. 이에 따라 결국 보수연합 정부는 2007년에 개별적 근로계약이 사회적 보호계층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하였다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수정법안을 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정안만으로는 점차 커져가는 호주 국민들의 법안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 노동조합은 워크초이스법안이 시행된 이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통해 똑 같은 일을 더 못한 급여와 업무조건으로 하게 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발표함으로써, 많은 호주 국민들이 그동안 막연히 느끼고 있던 직업적 불안정성의 확대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데 성공했다. 워크초이스법안의 도입과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급격히 상실한 보수당 정부는 결국 2007년 11월, 현직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에서마저 패배하는 호주 정치 역사상 드문 장면을 연출하며 케빈 러드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에게 큰 의석 차이로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케빈 러드 총리의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겠다.

7) Balnave, Brown, Maconachie, & Stone, Bonus supplement, Forward with Fairness vs WorkChoices, Employment Relations in Australia, 2n Edition, Wiley,

8) Balnave, Brown, Maconachie, & Stone, Bonus supplement, Forward with Fairness vs WorkChoices, Employment Relations in Australia, 2n Edition, Wiley,

■ 케빈 러드 노동당의 노사관계 개혁

워크조이스법안 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케빈 러드의 노동당 정부는 집권 직후 관련 법안의 손질과 검토에 곧바로 착수했다. 케빈 러드 총리의 노사관계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점진성’에 있다.⁹⁾ 그는 여러 가지 노동개혁 의제들 가운데 각종 이해단체의 저항이 가장 적은 사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뒤로 미루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안의 발효 일을 수년 후로 명시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변화를 맞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보수연합 정권이 노동시장정책을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 뒤 거센 역풍을 맞았던 역사와 대비되면서 노동당 정부가 여러 이해집단으로부터 골고루 높은 지지를 받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케빈 러드 총리의 노사관계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현재까지 도입된 중요한 법안 중 하나는 집권 후 첫 분기에 통과된 노사관계 수정법안(Workplace Relations Amendment Act 2008)이다. 이 법안은 보수연합 정부가 도입했던 노동시장 자율화 법안 중 상당부분을 점진적으로 폐지(phasing out)하고, 1996년 보수연합 집권 이전의 제도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개별적 근로계약에 대한 것인데, 수정법안은 개별적 근로계약(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의 신규 체결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은 과도적 계약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의 개별적 근로계약제도가 폐기되도록 하였다.

2008년 중 도입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6월에 발표된 강화된 근로계약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다. 이 안에 따르면 모든 근로계약은 아래의 10가지 항목에 걸쳐 제시된 최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해야 한다.¹⁰⁾ 이는 보수연합 정부 시절에 최소 계약 기준이 5개 항목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강화된 것이다.

9) Russell Lansbury, 2008. Address to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dustrial Relations Society of Western Australia

10) www.workplace.gov.au

- 주당 최대 근무 시간 (38시간)
- 미취학 연령 아동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
- 육아 휴가를 얻을 권리
- 연중 휴가 일수(최소 4주)
- 간병휴가
- 사회봉사 휴가
- 장기근속 포상 휴가
- 공휴일
- 계약 해지 통고 및 정리해고 보상금
- 근로자 권리에 대한 정보 (the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제공

이렇게 취임 첫 해에 도입된 변화에 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케빈 러드 총리의 노동개혁 방향은 2008년 11월 25일 호주의 노동부 장관이 연방하원에 상정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공정작업법안(Fair Work Bill)의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현재 안¹¹⁾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될 호주공정작업청(Fair Work Australia, FWA)은 기존의 관련된 위원회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호주의 노동 문제를 이끌게 되는데, 호주공정작업청(FWA)의 주요 권한으로는 노사협약에 대한 인준권, 최저임금의 조정, 부당해고와 노사분쟁의 처리와 조정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과거 워크초이스법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권한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이미 공표한 10대 최소근로계약기준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자가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회피하려고 할 경우 호주공정작업청(FWA)은 종업원의 과반수가 단체협약을 하기 원함을 확인할 경우 고용자에게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작업법안은 일방적으로 노조의 편만을 들고 있지는 않은데, 그 대표적인 예는 굳이 공식 노동조합이 아닌 종업원 조직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이 법안은 종업원의 과반수의 의사가 대표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며, 그 주체가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조직이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존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수연합 정부 시절 불법으로 명시된 패턴협상(하나의 사업장에서 맺은 협약을 기준으로 다른 사업장의 협상을 이끄는 전략)은 새로운 법안에서도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1) <http://www.workplace.gov.au/workplace/Publications/Legislation/FairWorkBill.htm>

종합적으로 볼 때, 케빈 러드 노동당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과 정책들은 보수연합 정부가 도입했던 워크чо이스법안의 지나친 노동유연화 정책을 폐기 및 보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기본적으로 노동당다운 정책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정책들은 지난 20여년 간 진행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의 큰 흐름과 장점을 인정하면서 고용자 단체의 요구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들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현실을 인정하는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동당 정부의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러드 총리의 노동개혁 정책은 노동계나 사용자단체 어느 쪽으로부터도 적극적인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¹²⁾ 총선에서 노동당을 적극 지지했던 노동계는 실망과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듬어진 노동정책을 발표해 왔기 때문에 어느 이해관계자 집단 쪽에서도 적극적인 반대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하원에서 심사 중인 공정작업법안도 충분한 사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안 상정과 동시에 야당 당수의 지지 표명을 이끌어 냄으로써 원만한 의회를 통과 가능성을 극대화해 둔 상태이다.

■ 맺음말

세계 각국이 최근 유래 없이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호주는 비교적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1년여 전 보수연합 정권에 이어 집권한 케빈 러드 총리는 유래없이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자의 권리 확대, 저소득층 생활지원, 다극화 외교, 환경 및 에너지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노동정책에 있어서 케빈 러드 총리의 노동당은 과거 보수연합 정권이 지나치게 밀고나가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급진적인 노동유연화 법안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지난 20여년 간 진행되어 온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중앙 집중적 노사관계에서 분권화된 기업단위 노사관계)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내놓으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일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호주는 2008년에 놓인 개혁의 이정표를 차분히 따라갈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으로도 비록 예년보다 더디기는 하겠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KLI**

12) <http://www.abc.net.au/news/stories/2008/11/25/2429177.htm>